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

일련 번호	262
----------	-----

발의년월일 : '92. 2. 14.

발 의 자 : 이 정 훈 의원외 10인

최근 되풀이되는 일본당국의 독도영유권주장 망언발언과 관련하여, 반일감정에 대한 국민정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보, 우리삼척지방의 각종사료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히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를 그들의 영유권이라고 망언을 되풀이 하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작금의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감시선배치등,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독도영유권 주장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초 국가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 더이상의 분쟁의 시비를 없애야 한다.

독도분쟁의 시초가 된 일본 시에마현 고시 제40호가 나오기전 5년전에 발간된 대한제국의 관도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독도와 역사적으로 가장 인연이 깊은 우리 강원도 삼척지방의
향토사료에도 독도의 명칭이 우산도, 상봉도, 가지도, 석도외에도
우청도라는 이름으로 명기되어 있어,

옛 삼척지방의 부사들이 수시로 울릉도를 순찰한 사실로 미루어,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더 이상의 시비소지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금의 일본정부의 잇따른 독도문제의 망언은,
어디까지나 일본당국의 망언으로써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역사사료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유권이 명백함에도 계속 망언을 되풀이 하고,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계획을 강행한다는것은
그들의 부당한 침략적 역사의 오욕을 만세계에 재현하는 행위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망국적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수가
없다.

따라서, 일본당국은 작금의 독도영유권주장 망언을 즉각 중지할것을
우리 10만 삼척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전원과 10만 삼척시민모두는
더이상의 시비소지가 재발될시, 반일항의는 물론
어떠한 국가적 대응행위에도 적극 동참할것을 천명한다.